

17일 Market Index			
코스피	6191.92	코스닥	1170.04
(-34.13)		(+7.07)	
금리	3.371	환율	1460.00
(+0.031)		(-14.60)	

중동 종전 기대감
가상자산 가격 상승
비트코인 7.5만달러
04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찬물' 美 "수일 내 전투 재개될 수도"

중동 휴전시한 압박

2차 종전협상 앞두고 긴장감 고조 호르무즈 개방·핵 등 입장차 여전히
이란 국회의장 "최종논의는 멀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다시 걸어 잠근 '호르무즈 출입구'는 과연 열릴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1차 휴전도 끝나간다. 시한인 4월21일(미 동부시간) 지정 전 협상당사국 간 돌파구 도출 여부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끈다.

당사국 중 별도로 휴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행보도 주목받는다. 양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열흘간의 휴전에 들어갔으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경고 성명을 내는 등 불과 하루이틀 만에 뼈대대는 모습이다.

우선 파키스탄이 중재 중인 미국-이란 간 협상은 크게 4가지의 결과 추론이 가능하다. 즉 ▲휴전 기한의 연장·2차 협상(1차는 4월 7~21일 2주간) ▲진전에 의한 종전협상(세부안 조율) 개시 ▲무기한 휴전(종전) 선언 ▲협상 결렬에 따른 전투 재개 등이다.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미국 측 요구) ▲농축우라늄 비축 포기



지난 12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실종자를 찾아 나서고 있다. /AP·뉴시스

·이전(미국 측 요구) ▲중동지역 미군의 철수(이란 측 요구) ▲전쟁피해 전면 보상(이란 측 요구) 등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 그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2척에 포격을 가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18일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고속 공격정은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을 항행하던 유조선 1척을 공격했다. 또 오만 북동부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1척이 공격 받았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다만 사상자 보고는 없었다.

AFP통신·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19일 TV

연설에서 "협상에서 일부 사안은 결론을 도출했으나 다른 사안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아직 최종 논의 단계와 거리가 멀다"며 "이견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근본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는 있지만, 적군이 실수를 저지르면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의 기뢰 제거 작업 등에 대해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는 무모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18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틀어막았다. 미국이 이란 해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기 전에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 이란의 재봉쇄에 따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 결과에 대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돌파구가 지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투는 수일 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상폐 회피' 불공정거래 막는다 공시심사 강화·회계감리 확대

금감원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 "좀비기업 차단... 자본시장 신뢰 회복"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방위 감시에 나섰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오는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등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요건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대표적인 불법행위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지만 처음 공시한 대로 유상증자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했다.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허위로 자금을 확충했다. B사는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될 위기에 처했지만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

다. C사는 기준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의 위험에 놓이자, 일반투자자가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단기 시세조종을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형을 포함해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에 나선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위적 주가 부양,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시 심사도 강화된다. 한계기업이 제출하는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금 사용 목적과 투자 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금 유용이나 허위공시의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정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회계 감리 역시 확대된다. 금감원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늘리고,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좀비기업의 시장 잔존을 차단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

m-커버스토리

국내 대형 전기트럭 전용 충전기 수습개편

친환경 물류전환 제자리

충전기 설치 비용 등 현실적 장벽 "맞춤형 인프라 구축 전략 시급"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100만대 시대가 열렸지만 물류 현장은 충전 인프라 문제로 대형 전기트럭 보급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전용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9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의 전기차 충전소 통합정보시스템 차지인포에 따르면 올해 초 국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49만9000기에 달한다. 반면 대형 트럭 전용 충전기는 수십개에 불과하다. 승용차용 충전기는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보급되고 있지

만 대형 트럭 전용 시설은 볼보트럭 코리아가 전국 3곳에 26기를 구축한 것을 최초로 2024년 한국도로공사가 추풍령(360kW)과 인양, 통도사휴게소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충전 용량은 승용이 완속(3~22kW), 급속(50~200kW)이며 대형 트럭의 경우 초급속(350kW 이상)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중·대형 전기트럭은 기존 고속도로에 설치된 충전소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제는 대형 트럭용 충전기 설치 비용이다. 대형 트럭용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고압 수전 설비가 필수적인데, 이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승용전기차의 몇 배에 달한다. 또 도심 인근이나 물류 거점에 대형 트럭이 진출입할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대형 전기 트럭의 활성화 위해서는 승용차와 분리된 '화물차 전용 충전 거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속도로 나들목(IC) 인근이나 물류 터미널 내에 대용량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전용 스테이션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젤 등 내연기관 화물차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퇴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전기차로 넘어가기엔 비용과 충전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며 "충전기 숫자를 늘리기보다 차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프라 구축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 홍준표, 청와대 오찬 후 총리실에 "억측 안 하셔도 된다"
- ▲ 오세훈 "대통령 혐의 지우려 사법부 조롱, 선열 통곡할 것"



- ▲ 유명하 "주호영·이진숙과 무소속 단일화는 절대 안 해"
- ▲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李' 공소취소' 퇴로 만들기 시도...검사 사지로 몰아"

- ▲ 배현진 "열흘 집 비운 가장, 돌아오면 거취 고민하길" 장동혁 직격
- ▲ 조국 "4·19 혁명 66주년, 내란 세력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 만들 것"